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6.16.(화) 6월 3주차 (제26-37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통상) G7 정상회의 개최(6.15~17),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 재편 논의 ····· 2
- (무역협정)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 동향 및 현지 반응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연방항소법원, 무역법 122조 관세 판결 집행정지 결정 ····· 9
- (관세) 美 하원 공화당 의원, 해외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요청 ····· 9
- (투자) 美 의회, 한국·일본 등 주요국 대미 투자약정 감독 법안 발의 ····· 10
- (자동차) BNEF, 美 전기차 정책지원 축소로 중장기 수요 하향 전망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에너지, 통상규제, 외국인 투자 등 3건 ····· 12
- (행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허드슨연구소 등 3건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6.17(수)	• 5월 미국 소매판매(U.S. retail sales, May) • FOMC 기준금리 결정(FOMC interest-rate decision)
6.18(목)	• 6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June 13) • 5월 경기선행지수(Leading index, May)
6.19(금)	• 현지 공휴일(Juneteenth federal holiday, none scheduled)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통상) G7 정상회의 개최(6.15~17),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 재편 논의

- 프랑스,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을 핵심 의제로 제시
- 경제·통상 의제로 중국 공급과잉 대응, 핵심광물 확보, 에너지 안보, AI 거버넌스 등 논의 예정
- 주요 성과로 공급망 안정화 및 전략산업 협력 강화 거론, 향후 공동성명 채택 여부 주목

1. 개 요

□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Evian-les-Bains)에서 개최(6.15~17)

- **프랑스는 2026년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올해 핵심 의제로 선정**

- 이번 회의를 맞아 중국의 공급과잉(overcapacity), 글로벌 투자 불균형, 공급망 취약성 확대가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

- 주요 의제로 △글로벌 경제, △핵심광물 및 공급망, △중동 정세 및 에너지, △AI 및 디지털 경제 등이 논의될 예정

- 특히,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과 EU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은 초청국(Outreach Country) 자격으로 참석

2. 상 세

□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논의 본격화

- **(글로벌 경제) 프랑스가 제시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 의제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

- 프랑스는 중국의 공급과잉(overcapacity), 미국의 재정·무역적자, 유럽의 투자 부족 문제를 글로벌 경제의 주요 불균형 요인으로 지목하며 주요국 간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중국의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능력 확대와 수출 증가 문제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글로벌 시장 왜곡 요인으로 지목하며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

- **(핵심광물 및 공급망) 핵심광물 수급과 관련된 공급망 안정화는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된 경제 의제 중 하나로 평가**

- 미국·캐나다·EU 등은 희토류, 리튬, 니켈, 흑연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

- 현지 전문가들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기존 자유무역 중심 의제를 대체하며 향후 G7 산업·통상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

- **(중동 정세 및 에너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안보 및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논의가 주요 경제 의제로 부상**

- 중동 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LNG, 원전, 전력망,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긴장 지속으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AI 및 디지털 경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AI 거버넌스를 선정하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국제 규범 마련 논의를 추진 중**

- 주요 논의 분야로 △ AI 안전성 확보, △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 △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 중소기업 AI 활용 확대 등 거론

- OpenAI, Google, Anthropic, Mistral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하며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

3. 현지 반응 및 전망

□ 경제안보 중심의 G7 협력체제로 전환 가속

- **이번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중국 공급과잉 대응, 핵심광물 확보, 에너지 안보, AI 거버넌스 등이 주요 경제 의제로 부상하면서 G7의 정책 논의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광물 확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G7 논의 역시 경제안보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은 G7 정상회의에 대해 프랑스가 강조하는 다자주의 경제협력과 미국의 경제안보 중심 정책이 교차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

  - 중국 공급과잉 대응,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는 주요국 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관세정책, 대중국 접근 방식, 디지털세 등 일부 통상 현안에서는 국가별 이해관계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 **Atlantic Council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 전략광물 확보, 에너지 안보, AI 경쟁력 확보 등이 이번 정상회의를 규정하는 핵심 경제 의제가 될 것으로 평가**

  - 특히 경제안보가 G7 경제협력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향후 통상·산업 정책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전략산업 육성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정상회의 폐막을 앞두고 주요 관전 포인트로 공동성명 채택 여부와 △중국 공급과잉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방안, △AI 거버넌스 후속 조치 등 문구의 최종 포함 여부 주목**

  - 해당 의제들이 공동성명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지가 향후 G7 차원의 공급망 협력체계 및 경제안보 협력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WSJ(6.16), 로이터(6.15), CFR(6.11), Atlantic Council(6.12) 등 종합

(무역협정)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 동향 및 현지 반응

- ’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USMCA 첫 번째 6주년 공동 재검토 개시 예정
-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연장을 위해서는 ‘핵심 쟁점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미 현지에서는 ‘제한적 개정 후 협정 연장'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가

1. 개 요

□ USMCA 개요 및 재검토 매커니즘

- **(개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3국 간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무역협정*('20년 7월 1일 발효)**

  * 34개 챕터·12개 부속서한으로 구성되며, 연간 역내 교역 규모 약 1조 8,000억 달러, 미국 내 일자리 약 1,300만 개에 달하는 북미 경제통합의 핵심 기반

  - 3개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와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의 원산지 규정(ROO) 강화*, 노동·환경 규범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실질적 이행·집행력 제고*

  * 자동차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상향(NAFTA의 62.5%→75%), 노동가치기준(LVC) 시간당 16달러 고임금 공정 비율 40%, 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 비율 70% 의무화,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 세계 최초 도입

  - 또한, 디지털 무역 규정 신설, 국영기업 규율,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 기존 NAFTA 대비 협정의 적용 범위와 정책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

- **(재검토)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일몰 조항(Sunset Clause)*’ 도입, 6주년인 ’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초 공동 재검토 개시 예정**

  * 일몰 조항은 6년마다 협정의 장기적 유효성 정기적 점검,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기존 FTA 대비 제도적 유연성과 정책 통제력을 강화한 구조

구분	협상 결과에 따른 향후 일정
3개국 합의 시	16년 연장 → 2042년까지 유효 (6년 후 재검토)
합의 실패 시	연례 검토 체제 전환 (매년 종료 통보 가능) → 2036년 7월 1일, 자동 종료

** 합의 실패 시에도 협정 조항은 연례 검토 기간(~2036) 동안 계속 유효*

2. USMCA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 USMCA 3개국 공동 재검토 추진 주요 현황

-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공개 의견 수렴 공고('25.9),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25.12) 의회 보고('25.12) 등 첫 공동 재검토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 캐나다 멕시코와 사전 협의 진행**

- **(미·멕시코)** USMCA 재검토 준비를 위한 2차 협의('26. 5. 27~29) 에서 미국은 ▲미국산 부품·소재 비중 50% 의무화 ▲역내가치비율(RVC) 상향(75→82%)을 핵심 요구로 제시

- **(미·캐나다)** 양자 간 무역 현안 논의('26.3.6), 캐나다, 미국·멕시코에 서한을 보내 3국 협정을 16년간 연장 권고 및 미국에 부문별 관세 논의 요청 ('26. 6.2)

※ 캐나다·멕시코는 3자 협정 틀 유지 공동 표명, 미국은 의제별 양자 채널로 협의 진행

<USMCA 재검토 주요 일정 및 주요 추진 경과(2025~2026.6.15)>

주요 일정	협의 추진 경과
협정 발효 (2020.7.1)	•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 USMCA 발효 • 협정 제34.7조에 따라 발효 6주년(2026.7.1.)을 기점으로 최초 공동 재검토 의무화
美 국내 절차 개시 (2025.9.17)	• USTR, 연방 관보에 재검토 관련 공개 의견 수렴 공고 게시 • 산업계·노동·시민사회·기술업계 등 약 1,500건 의견서 접수
공청회 개최 (2025.12.3.~5)	• USTR 주관 3일간 공개 청문회 실시 • 산업계·노동·학계·시민단체 등 100여 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USTR 의회 보고 (2025.12.16.~17)	•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법정 보고 시한에 앞서 하원 세입위·상원 재정위에 협정 평가 및 권고안 보고 (서면이 아닌 비공개 구두보고 형식으로 진행)
미·멕시코 양자 협의 개시 (2026.3.5)	• 그리어 USTR 대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재검토 준비를 위한 양자 기술 협의 첫 라운드 개시 • 역내 생산·고용 증대 및 비시장경제(중국 등) 투입재 의존도 감축에 초점 * ***캐나다 미참여, 미국·멕시코 양자 채널로 협상 개시***
미·캐나다 첫 공식 접촉 (2026.3.6)	• 그리어 대표·르블랑 캐나다 통상장관 회동 • USMCA 재검토 및 양자 무역 현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진행 언급
미·멕시코 고위급 회담 (2026.4.20)	• 그리어 USTR 대표,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 등 고위급 면담 진행 • 공동성명 발표: 경제안보·ROO·핵심광물·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협의 추진
미국-멕시코 첫 공식 협상 라운드 (2026.5.27~29)	• 그리어 USTR 대표·세인바움 대통령, USMCA 재검토 ***첫 공식 협상 진행***
캐나다, 16년 연장 요청 서한 발송 (2026.6.2)	• 캐나다, 미국·멕시코에 서한을 보내 ***3국 협정을 16년간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부문별 관세에 대한 병행 협의도 함께 요청 • 르블랑 장관과 자넷 샤레트 캐나다 수석 통상협상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 회동
미·멕시코 2차 협상 (예정) (2026.6.16~17)	• 워싱턴에서 농업 및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주제로 2차 협상 진행 예정 (캐나다 미참여). 7월 20일 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3차 협상 예정
3국 공동 재검토 개시 (2026.7.1~)	• 미·멕시코·캐나다 3국, 최초 공동 재검토(Joint Review) 공식 개시 • 자동차 원산지·에너지·대중 공급망 규율·디지털 무역 등 쟁점별 협상 진행 • 협정 운영 평가 및 16년 연장 여부·향후 검토 주기 결정 예정

[자료: USTR, CSIS, Brookings, CFR 등 공개 자료 종합]

3.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지 반응

- **(언론) 트럼프 대통령의 갱신 거부 발언, 협정 유지를 보장 불확실성 및 역내 가치(RVC) 비중 상향 조정 가능성을 쟁점으로 집중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조항을 둘러싼 장기 협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언급(블룸버그)

  - 미국이 자동차 관세 특혜 요건으로 '미국산 부품·소재 비중 50%'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USMCA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월스트리트저널)

- **(업계) USMCA의 신속한 연장 지지 및 실질적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

  - USMCA가 미국 일자리 1,300만 개를 뒷받침하는 검증된 성과*임을 강조, '26년 내 공동 검토 조기 완료를 통한 안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미 상공회의소)

    * USMCA를 '지난 5년간 검증된 성공'으로 평가하며, 협정 핵심 구조 유지·제한적 업데이트 권고, 투자환경 악화가 북미 전체 경쟁력 훼손 주장

  - 안정적·예측 가능한 무역 및 무관세 지지, 원산지 규정(ROO) 추가 강화에는 반대,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미 자동차협회)

  - 캐나다·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우회 수입을 문제로 지적, USMCA 재검토에서 집행 강화·추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미 철강협회)

  - USMCA는 '실패한 협정'*이라고 규정,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① 북미 최저 제조업 임금제 도입 ② 오프쇼어링 기업 패널티 강화 ③ 현지 생산 의무화 요구(전미자동차노조)

    * USMCA 하에서 멕시코 노동자 임금은 여전히 중국보다 낮다고 언급하며, 협정 실패 규정

- **(싱크탱크) 주요 의제별 조건부 연장이 유력하나, 3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단기 리스크로 평가하며 협상 구도 및 시나리오 분석**

  - '전통적 다자 협상이 아닌 의제별(issue-by-issue) 협상 구도' 분석, 원산지 규정·미국산 역내가치·비시장경제국(중국) 대응 조항을 핵심 의제로 언급(국제전략연구소)

  - USMCA 재검토에서 북미 자동차 산업의 높은 역내 교역 의존도로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안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언급, 중국 전기차·부품 성장과 멕시코 생산 확대에 따른 역외 우회 차단이 주요 정책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브루킹스)

- USMCA 재검토 결과가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자동차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 조치(생산거점 재조정·재고 완충·이중 조달 등)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애틀랜틱 카운슬)

- 협상 실패 시 '연례 검토 지속'이 기업 확실성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10~15%의 일괄 관세와 더 높은 232조 관세를 부과 가능(피터슨경제연구소)

□ (전망) 그리어 USTR 대표는 쟁점의 '성공적 해결'을 재검토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공급망 재편·경제 안보 중심의 협정 개편 예상

• 그리어 USTR 대표는 쟁점의 '성공적 해결'을 재검토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

- **(조건부 연장)** 그리어 대표는 "USTR은 대통령의 선택*을 열어두고 확인된 쟁점 해결을 목표로 협상하되, **해결이 된 경우에만 연장을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캐나다·멕시코로부터 필요한 것이 없다"고 발언, USMCA 갱신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종료 가능성을 시사('26.6)

- ▲비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오프쇼어링 억제, 중국 등 비시장경제 우회수출 차단,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의 역내 조달 확대에 초점

  * 자동차·의류 제외 대부분의 비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단순 가공 또는 조립만으로도 USMCA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 제3국(중국) 소재·부품의 역내 우회 편입 가능

• 현지 산업계·연구기관은 '기본 구조 유지·일부 개정'을 유력 시나리오로 언급, 협상 난항 시 연례 재검토 전환 및 미국 탈퇴·양자협정 전환 가능성도 거론

- 주요 쟁점에 대해 부분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3국은 협정 틀을 유지한 채 16년 연장(~2042년)에 합의할 가능성 유력(베이커 매켄지)

  * 원산지 규정(ROO) 일부 강화, 노동 집행 보완, 비시장경제 대응에 관한 규범 정비 포함 가능

• 수정 없는 단순 연장은 지난 1년간 무역 긴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으며, 완전 결렬 역시 3국 간 경제·정치·사회적 연계를 고려 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

-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를 반영한 조건부 갱신으로, 멕시코·캐나다가 일정 수준 양보할 것으로 전망(시티그룹 보고서)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USTR, 인사이드(6.10), 블룸버그(6.5) 등 현지 주요 언론 및 싱크탱크, 보고서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美 연방항소법원, 무역법 122조 관세 판결 집행정지 결정

- **美 연방항소법원(CAFC)은 무역법 122조 관세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 사유를 인정하고,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집행정지를 전원일치로 결정(6.11)**

- CIT는 5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122조 관세가 국제수지 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CAFC는 해당 법률 해석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논리 수용

- CAFC는 위임금지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관련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 권한 행사 범위와 요건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

-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후속 소송 증가와 CBP 행정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했으며, 원고 최종 승소 시 관세 환급 및 이자 지급으로 손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122조 관세의 적법성은 본안 심리 및 추가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며, 수입업계의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Today(6.11), 인사이드(6.11)

(관세) 美 하원 공화당 의원, 해외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요청

- **美 하원 공화당 의원 48명, 해외 약가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촉구**

- 미 하원 공화당 의원 48명은 USTR에 해외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301조 조사 착수를 촉구

- 의원들은 독일·일본·프랑스·캐나다 등의 약가 통제 정책이 미국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국과 유사한 약가 협상 모델을 다른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232조·301조·MFN 등을 활용하여 의약품 가격 격차 축소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영국과의 약가 협정을 통해 영국의 의약품 지출 확대를 조건으로 일부 관세 면제를 제공하는 방식의 합의를 체결

- 미국은 232조 관세와 MFN(최혜국) 약가 정책을 통해 의약품 가격 격차를 축소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와 미국 정부의 약가 정책 참여를 유도

- 미국은 독일·스위스의 의료비 억제 정책 강화·일본·프랑스·캐나다의 가격 통제 구조 유지가 각각 시장 왜곡 및 글로벌 R&D 비용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

- 의원들은 301조 조사를 통해 관련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영국과 유사한 약가 합의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

▪ 자료원 | 폴리티코(6.10), 인사이드(6.10)

(투자) 美 의회, 한국·일본 등 주요국 대미 투자약정 감독 법안 발의

• **美 민주당 의원들은 대미 투자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심사·투자약정 이행점검 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하며 투자약정 감독 강화 추진(6.11)**

* Foreign Investment Review Monitoring and Commitment Tracking Oversight Board Act (FIRM Commitment Tracking Oversight Board Act)

-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D-WI)과 로 카나 하원의원(D-CA)은 동 법안이 투자약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일자리·공급망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동 법안은 투자약정 이행 점검을 위한 외국인투자심사청(FIRA) 신설을 추진**

- FIRA(Foreign Investment Review Authority)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대만 투자약정 및 향후 미·중 무역·투자위원회 관련 계획 등을 감독 대상으로 명시

- FIRA는 투자 규모·시기·사업 내용·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

- 또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강제노동 연계기업 목록 등 제재 대상 기업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료원 | Inside Trade(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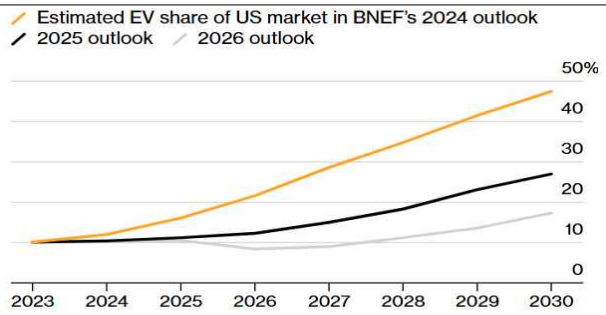
(자동차) BNEF, 美 전기차 정책지원 축소로 중장기 수요 하향 전망

- **BloombergNEF, 미국의 전기차 정책지원 축소를 반영해 중장기 수요 전망을 2년 연속 하향 조정**

- 미 승용차 판매 내 전기차 비중 전망이 '30년 17%로 하향('25년 27%, '24년 48%) 됨에 따라, 글로벌 전기 승용차 판매 전망도 기존 대비 약 340만 대 감소한 3,560만 대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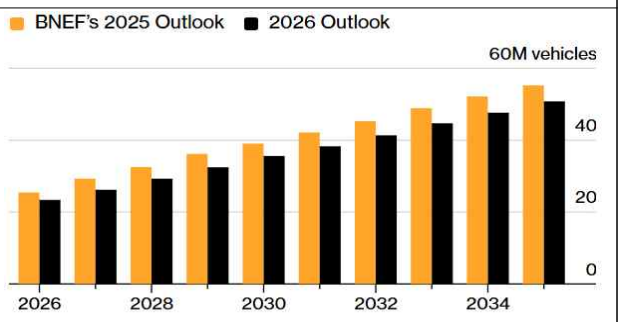
- 전망 하향은 ▲연비 기준 완화, ▲캘리포니아 전기차 판매 의무 권한 폐지, ▲7,500달러 연방 세액공제 폐지 등 전기차 보급 유인 약화에 기인

〈BNEF 미국 승용차 시장 내 전기차 비중 전망〉



* '30년 美 승용차 판매 내 EV 비중 17% 전망, 보급 속도 둔화 반영

〈BNEF 미국 승용차 시장 내 전기차 비중 전망〉



* '30년 美 승용차 판매 내 EV 비중 17% 전망, 보급 속도 둔화 반영

[자료원] BloombergNEF

-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생산·투자계획을 축소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성장세도 둔화 전망**

- Stellantis, Ford, GM, Honda 등 주요 완성차는 전기차 부문 수익성 악화로 최근 1년간 최소 27종의 전기차 모델 생산을 축소·취소·지연하며 전기차 전략 재조정 확대

- 중국은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약 62%를 차지하며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나, 보조금 조정 영향으로 판매 증가율은 '24년 39%, '25년 16%에서 올해 10% 수준으로 둔화 전망

▪ 자료원 | BGOV(6.16)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에너지 (6.9)	S.4721 (상) (6.9)	Jeff Merkley (민)	〈재생에너지 형평성 회복법(Restoring Renewable Energy Parity Act)〉 ▪ 전국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향후 유사한 명령의 발령을 금지
통상규제 (6.10)	H.R.9244 (하) (6.10)	Pat Harrigan (공)	〈사업활동세 단순화법(Business Activity Tax Simplification Act)〉 ▪ 역외 기업에 대한 주(州) 사업활동세 부과 요건을 연방 기준으로 통일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경우 모든 사업활동세 부과를 제한하며, 디지털 거래는 물리적 실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
외국인 투자	H.R.9284 (하) (6.11)	Ro Khanna (민)	〈외국인투자심사감독위원회 설치법 (Foreign Investment Review Monitoring and Commitment Tracking Oversight Board Act)〉 ▪ 미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청(FIRA)'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의 투자 약속과 향후 미·중 무역·투자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약속 이행을 감독하는 법안

* 6월 1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Peterson Institute	6/23 9:00 am	〈Geopolitics and global value chains: Implications for trade policy and development in Asia〉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고도화 전략, 그리고 향후 1년간 예상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논의	링크
CATO	6/25 1:00 pm	〈Win-Win Trade in North America: Six Years of the USMCA〉 ▪ 애드리언 스미스 하원 무역소위원장과 USMCA 5년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패널을 통해 협정의 향후 과제와 북미 3국 경제관계 논의	링크
Hudson Institute	6/25 8:30 am	〈Securing America's AI Advantage: A Discussion on US Export Control Policy with Senator Jim Banks and Chairman Brian Mast〉 ▪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는 수출통제 정책을 설계·강화하는 핵심 주체로 논의	링크

* 6월 1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Trump-Iran Deal Allows Tehran to Immediately Sell Oil (트럼프-이란 합의, 이란 원유 판매 즉시 허용)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따라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운송 관련 제재도 완화될 예정
The Washington Post	Trump insists U.S. will not invest money in Iran as part of peace deal (트럼프, "평화 협정 대가로 이란에 미국 자금 투입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일부 인사들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민간 자본이 조성하는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
The New York Times	Japan Raises Rates to 31-Year High to Ward Off War Inflation (일본,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기준금리 31년 만에 최고 수준 인상)
	일본은행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 미국의 압박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
CNN	AI is sparking a jobs boom — just not for newbies (AI가 일자리 붐 이끌지만 …신입에게는 높아진 문턱)
	미국 기업들이 AI 인재 확보에 나서면서 관련 일자리는 급증하고 있지만 AI 관련 채용공고 가운데 71%가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경력직 또는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
Bloomberg	Citi Chief US Economist Defends Unpopular Fed Rate-Cut Call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 논란의 연준 금리인하 전망 옹호)
	씨티리서치 수석 경제학자 앤드류 호렌호스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방 위험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망

* 미국 동부 시간 6월 16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2026.5월
US26-13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5월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